

# 北韓의 外國投資와 經濟改革 展望

卞 宗 壽\*

## —〈目 次〉—

- I. 머릿말
- II. 북한의 외국투자, 기술의 필요성
- III. 재일교포 합영경험
- IV. 핵문제 해결후의 북한 개방전망
- V.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 VI. 남북한 경제통합 속도와 독일통일 교훈
- VII. 맺는 말

## I. 머릿말

21세기는 아세아 태평양의 세대 또는 환태평양 시대의 元世紀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동태적인 경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질서 및 인류문화발전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주축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를 뜻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동아시아는 인류 歷史上의 기록적인 경제 발전을 했고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을 이룩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동아시아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구라파 공동체 같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블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開放과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예를 보아도 사회주의 이념에서 오는 정치체제와 통치방법에 차이는 있었으나 경제의 기본과제인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에는 開放과 改革, 그리고 교류협력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미국멤피스 주립대학교수  
한미경제학회 회장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에 개방과 對外交流가 필요한 것은 북한 당국자들도 인식하고 정책으로 실천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공화국 정부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해 아세아 여러나라 인민들과 친선 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후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 총 26건의 대외 협정을 맺었는데 이 숫자는 북한이 지난 3년동안 체결한 대외 협정총수의 반이 되는 것이다.<sup>1)</sup>

북한은 근래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고 핵사찰 문제로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근 1년동안 핵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은 활발성을 이루지 못하고 남한, 일본 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對동남아 외교정책에서 엿보듯이 북한이 필요성을 느낄때는— 예로 식량이나 에너지 수입이 필요하거나 또는 베트남의 제한된 경제모델을 배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외국과 교류 협력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외국투자 및 기술전환 문제를 제일교포 대북투자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핵문제 해결후의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본고의 구성은 머릿말에 이어 제2장에서는 외국투자의 필요성과 제일교포의 대북 합영경험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재일교포의 대북투자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제4장과 5장에서는 북한 경제개방과 개혁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독일 통일 경험에서 본 남북한 경제속도에 대해 토론하고, 끝으로 맺는 말이 기술되어 있다.

## II. 북한의 외국투자, 기술의 필요성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개방과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인 변천이었으며 북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하루 밤 사이에 동구라파 수출시장이 없어지고 기술원조를 해 주던 동맹국들(특히 동독)을 잃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소련과 중국이 原油수출 보조를 철폐하고 더우기 수출결제를 硬貨로 할 것을 요구했다. 硬貨가 부족한 북한의 대소무역은 1991년 일년동안 27.7억달러에서 4.4억달러로 급감했고 소련으로부터의 원유수입도 440,000톤에

1) 한국일보 1994년 3월 22일

서 40,000톤으로 급락했다.<sup>2)</sup>

북한의 총무역량은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46.2억달러에서 27.2억달러로 줄었다. 이것은 무려 41% 감소이며, 1992년에는 26.2억달러로 또 감소하였다.(김봉덕 p25) 이 기간에 북한경제도 전면적으로 위축 1990년에는 負3.7%, 1991년(負 5.2%), 1992년(負 5%)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sup>3)</sup> 이러한 時點에서 북한은 새로운 교역 대상자를 찾아 외국자본 및 기술을 도입 경제난을 타개해야만 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92년 10월과 1993년 1월 사이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외국인 기업법」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환관리법」 및 「자유 경제 무역지대법」등을 제정 공포하였다.<sup>4)</sup>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발전 조류에 북한이 편승치 못하고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제일 우방국인 중국이 서방 기술과 외국자본을 도입, 경제를 부흥시킨 것을 목격했고, 특히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중국의 개방정책이 중국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이 외국자본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수인 기술이전, 기업관리, 해외시장 개척등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경제모델을 모방할 것이다.<sup>5)</sup>

중국의 개방모형은 대외적으로 경제특구제도하에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였고, 대외정책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수교를 맺고 수출을 진흥시켰으며 국제수지를 개선하였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중국은 1979년에 심천, 주해등에 수출 자유지역 공단을 설치하고 84년에는 천진, 대련 등 14개 연해 개방도시에 경제기술 개발구를 설치했다. 이지역 경제특구의 특징은 일정규모의 사업유치에 대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점이다.

중국의 초기 개방정책을 보면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꺼리고 외국인이나 해외 화교자본과 기술, 인재를 선호했다. 중국과 대만도 우리 남북한 관계와

2) 延河清 “남북한 무역성과 지수로 본 경험방안 고찰”, 「한국개발 연구」, 1993년 가을 p 8

3) 延河清, 상기인용, p 7

4) 민주평통사무처,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법 해설」, 1993

5) 변종수, “남북한과 동북아의 경제교류 협력증대방안”, 통일한국, 1992 10월호, p 70.

같이 극단 대립적 상태로 양국 정부 허가없이 자율적인 민간간의 교류와 소통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중국은 대만으로부터의 투자와 경제지원을 희망하고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붕괴를 교훈으로 여겨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도 급속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된 후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고 교역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기업도 대북투자에 대대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또 일본교포를 비롯한 해외교포들의 교역투자 참가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또는 북과 교포기업간의 교역으로 남북교류가 시작되고, 교류가 증대되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게되며 나아가서는 민족화합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의 외국기업과의 합영실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III. 제일교포 합영경험

북한의 합영기업은 在日 조총련교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관리하여 흔히 朝朝合營企業이라고 불리울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의 합영법에 의한 투자경험은 在日교포의 대북 투자경험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외국투자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1988년 10월에 시작 歷史가 그리 길지 않은 반면 在日 조총련 교포기업인들의 대북투자 기술이전의 경험은 북한의 합영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967년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해에 재일교포가 “애국목재공장”을 세웠고 1972년에는 “기와 제조공장과 봉제공장” 그리고 1977년에는 “건설기기 제조공장”등이 설립됐다. 이들 초기투자는 재일교포가 기증하여 “愛國工場”이라고 불리우고 있다.<sup>6)</sup> 이후에 북한이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시도했으나 외국투자 참가국은 일본에 국한되었고 일본의 합영투자도 거의 전부가 재일 조총련 교포들로부터 이루어진 한계점을 보였다. 북한이 조총련외의 日本投資와 합영사

6) 宮塚利雄, “북한의 합영사업과 일본기업”, 「北韓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3, p 45

업을 요청했으나 북한의 대일 무역대금 미지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본 기업은 참가하지 않았다.

조총련은 북한과의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6년에 “合營事業 研究會”를 오오사카에 창설했고 그후 이 연구회와 북한의 “합영사업 준비위원회” 사이에 북한과 재일교포 상공인간의 경제합작, 합영사업을 統一적으로 促進하기 위해 「조선국제 합영총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촉진시킨 것은 1989년 4월에 북한과 조총련 合資로 설립한 「조선 합영은행」이다.<sup>7)</sup>

북한의 합영사업의 전성기를 1989년부터 1991년으로 보는데 이기간에 조총련과 합영한 계약은 70건, 투자총액은 120억엔이었다. 특기할 것은 이기간의 합영사업이 북한합영 초기의 서비스 중점과 달리 경공업, 광업, 기계, 화학분야 등 북한의 산업발전에 극히 필요한 생산분야이었다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북한당국자들은 경제발전에 다국적 외국자본, 기술이 필요한 것을 더욱 느끼게 되고 합영기업을 조총련 이외의 世界各國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대외 경제개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91년 12월에 나진, 선봉 자유무역 경제지대를 설치, 다국적 외국자본과 기술 유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자유무역지대” 설치하는 이들의 외국투자 기술유치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1984년 합영법에는 나진, 선봉과 같은 “경제특구”제도가 필요없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를 외곽지대인 선봉과 나진에 정한 이유는 경제특구 운용에서 수반되는 외국인들의 합리적 경영방법, 시장경제이념, 또는 자유사상 이념이 북한국민에게 “정신오염”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합영사업이 재일교포 이외의 외국인들에게는 소외되고 부진했다. 그 이유는 북한자체의 內部要因과 外部要因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9)</sup> 內部要因으로는

7) 상기인용, p 47

8) 상기인용, p 51-52

9) 延河淸 및 崔炳善 「북한, 일본의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변화전망」, 한국개발 연구원, 1993, p 16; 외부요인은 申熙九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경제 개방정책과 동북아세아권의 구상”(일어) 「월간 조선자료」, 1991년 11호, p 41, 延 및 崔, 상기인용 재인용

- (1) 합영 사업자간의 경영이념 차이
- (2) 통신, 도로, 교통시설 등의 사회구조시설 미비
- (3) 노동자의 西方 경영관리에 대한 이해 미숙
- (4) 과실이익의 송금보장등 법절차 미비
- (5) “자립갱생”의 북한정책에서 오는 경제구조상의 불균형
- (6) 대외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外部要因은 주로 국제적 요인으로서 서방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1) 봉쇄정책과 (2)부담과세 및 차별대우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외부요인은 주관성이 강한 해석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방국가들의 소위 “봉쇄정책”이나 “차별대우”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익 가능성이 없으면 去來를 하지않고 또 여신의 위험은 높은 이자율이 수반되는 것이 통례이다. 美國은 敵性국가와의 교역금지법을 북한에 적용하여 교역을 하지 않았다. 다른 서방국가의 소위 “봉쇄정책”은 북한당국의 불투명한 대외 경제개방 정책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비싼 이자율의 적용은 197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무역대금 지불불능에서 오는 여신 위험도의 금리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 IV. 핵문제 해결후의 북한 개방전망

韓, 美, 日의 共助체제나 韓, 日, 中의 경제 협력체제는 한국의 對北정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볼때 이들 각 국가 利害관계가 한국의 대북관계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일본,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그들의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또는 중국이 남북통일에 얼마만큼 협력할 것인가? 또는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그들의 대미, 대일 수교문제는 어떠한 方向으로 전개될 것인가?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현재 북한의 대외 접촉의 초점이 되어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그들의 수교협상에 사용하여 그들의 최선호 개방과 경제발전책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핵문제가 일단락 된 후에는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 일본의 자본, 기술을 그들의 경제발전에 맞추어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대미, 대일 수교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대미, 대일 수교가 쌍무적인 남북한 교류관계에는 그리 큰 진전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한국의 대북투자 및 교역증대 방안은 미국과 일본의 對北 경제진출로부터 일어나는 장애와 역경에 부딪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지속하여야 하고, 일본과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거주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 미 일의 재래적인 공조체제가 탈없이 지속되고 그리고 북한의 對美, 日 수교도 남한이 선호하는 方向으로 성사되었다 해도 이들 수교가 남북간 경제관계와 통일에 기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개방정책에 달려 있다. 즉 북한이 「체제개혁적 개방」을 지향하느냐 또는 「체제수호적 개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두方法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시장을 놓고 경합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체제개혁적 개방」은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도입을 뜻함으로 남북관계 긍정적인 면이 더 많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開放이 일어날 때는 일본, 미국기업의 對北진출이 북한의 개혁을 촉진시키며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시켜 남북경제교류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對美, 對日 수교가 계기가 되어 북한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경감시키게 된다.<sup>10)</sup>

반면에 對美, 對日수교 후에도 북한이 「체제수호적 개방」을 할 경우 일본과 미국의 대북한 경제협조는 북한의 막대한 군사비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및 정치적 대립이 계속된다는 이론에 합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귀결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북한을 상대로 또한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通商, 投資 및 技術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심한 경쟁관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sup>11)</sup>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힘쓸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첫째, 일본은 文化圈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 일본

10) 延 및 崔 상기인용, pp 92-93

11) 상기인용, p92

의 자본과 기술을 비교적 쉽게 도입 할 수 있고 또 관계개선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의 창문역할을 해 줄 수도 있으며 둘째, 일본에는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친북 조총련 교포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수교후 북한이 얻을 수 있는 對日 請求權 資本金의 범위는 일본이 1965년에 한일수교시에 지불한 5억불이 1994년의 현재금액으로 40억불로 추정된다. 또한 修交후에 재일 조총련 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 在日 조총련계 자산 내역

#### 조총련 및 산하단체 공유 부동산(토지, 건물) 추정 평가액

조총련	6조	엔
조선학교	11조	500억엔
신용조합	2조	400억엔
상공회		3000억엔
금강보험		300억엔
조선신보사		100억엔
기타단체		300억엔
	계 20조	2700억엔

#### 개인 보유자산

유홍업계 관계자	15조엔
유홍업체	5조엔
부동산업체	5조엔
기타	3조엔
	계 28조엔

資料 : 재일본 한국 조선인민통일연맹(延河淸 및 崔炳善 공저 「북한, 일본의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변화전망」 북한경제 연구센터, 북한자료 93-103, 한국개발연구원, p 66에서 재인용)



조총련의 資産은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융자 담보로 쓸 수 있는 부동산만해도 20조엔(1,9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총련의 경제력은 북한 경제 총생산고(GNP)의 약 6배가 되는 막대한 것이다.(1991년 북한의 총생산고는 300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다.)<sup>12)</sup>

## V.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체제수호적 개방은 대외관계의 개방뿐이고 경제체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반면 체제개혁적 개방은 改革과 開放이 병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단순한 제도상의 개혁은 경제 능률면에서 별효과를 보지 못한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첫째 私有財産에 對한 도약적인 變化가 일어나야 되고, 둘째로는 경쟁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중국도 처음에는 私有財産 관계를 革新하지 않았으며, 또 경쟁경제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과실 이익금을 기업 자체적으로 쓰게 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방회사에 투자하던가 기업노동자에게 상여금 또는 복지시설 혜택을 개량해 줄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국영기업체의 생산능률이나 과실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과실이익의 기업자체 사용의 효용을 보지 못했다.<sup>13)</sup>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은 국영기업체를 株式會社 기업체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개혁을 근래에 시작했다. 이러한 전환이 기업체의 사유화에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전환은 기업자산을 사유화한다는 것뿐 아니라 사유재산권도 시장화한다는 體制상의 큰 개혁을 뜻하는 것이다.<sup>14)</sup> 반면 북한이 1992년에 개정한 “합영법”이나 “외국인 투자법”등에 사유재산관계나 또는 경쟁경제관계 환경의 조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北韓은 앞으로 경제체제상에 근본적인 개혁없는 체제수호적 개방을 상당한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2) The Europe World Year Book, 1993, Europa Publishers London, p 167

13) M. K. Kang and K. Lee, “Industrial Systems and Reform in North Korea : A Comparison with China”, World Development, 1992, pp 954—955

14) 상기인용, p 955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도 북한은 제한된 개방을 하되 시장경제로의 體制改革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金日成 주체사상 통치체제를 고수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한에는 체제에 抗議할만한 정치세력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아 민중들의 항거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정책은 도시 인구집결을 방지하여 1980년에 인구의 15%만이 도시에 살고 있다. 북한에서는 도시생활이 일종의 특권이며 民衆항거의 온상지에 이들 특권계층이 많이 살아 항거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sup>15)</sup>

또 하나의 理由는 고도로 발달된 북한의 군수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比重이다. 북한에는 중장비戰車, 미사일 등을 제조하는 군수산업이 북한 총생산에 30%를 차지한다. 북한 당국자는 內, 外部의 군사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군수산업 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이다.<sup>16)</sup> 결론적으로 북한의 體制改革 전망은 현재 시점에서 희망이 적고 비관적이다.

## VI. 남북한 경제통합 속도와 독일통일 교훈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合理性和 정치 優先主義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후자를 선택하여 소련, 영국, 미국 등의 강대국이 독일 통일에 불가피하게 동조하게끔 만들어 낸 서독 콜 정부의 세계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17)</sup> 한편 경제적 合理性을 경시하고 “통일의 창문” 포착에 너무 치중하여 정치적 통합 이전에 通貨統合을 한 것은 독일이 통일 후에 경험하는 막중한 혼란과 사회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의 통화통합은 急進的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동-서독 두경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不完全한 경제 통합상태에서 많은 독일 경제학자 전문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되었다. 독일 중앙은행장(칼 오토 쿨)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통화통합을 동독에서 효율적인 경제개혁이 충분히 진전된 후에 할 것을 주장했었다. 갑작스럽고 불합리적인 독일의 통화통합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조정 매카니즘 작동을 조해하여 지역경제의

15) Kim, Sungwoo, "Recent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1993, 871

16) 상기인용, p 861

17) 徐丙喆, "獨逸 政治統合의 適程과 原動力", 統一問題研究(統一院), 1993 가을호, pp 9-36; 金在慶, "獨逸 經濟統合의 成果와 問題點" 統一問題研究(統一院), 1993 가을호, p 56

임금과 가격구조 특이성을 상실케하고 동독의 낮은 생산성의 보상과 동독의 부채해결을 위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국고금을 지출하도록 만들었다.<sup>18)</sup>

그러면 독일의 통화 통합의 경제적 왜곡범위는 얼마고 왜곡이 가져온 결정적인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 1989~90년 독일 통화통합 당시 구동독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서독 생산성의 약 30%에 불과했고 경제통합 이전의 암시장 동서독 화폐환율은 4,4:1이었다. 이것은 동독 기업 설비시설의 퇴화를 뜻했고 그들의 국제시장 경쟁력 약화의 실태를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콜정부는 동독의 임금, 물가, 소액예금에 대해 1:1의 교환비율(기타 경우는 2:1 교환비율)을 동독 화폐에 적용, 통화 통합을 단행함으로써 하루 아침 사이에 동독의 상품가격과 임금을 4,4배로 인상시킨 결과를 일으켰다.<sup>19)</sup> 따라서 원래 경쟁력이 없던 동독기업은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되어 파산, 대량의 실업자를 產出하게 되었다.

만일 화폐교환을 현실성 있던 암시장 가격인 4,4:1로 했다면 동독의 임금과 물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동독인이 선호하는 서독 또는 서방 상품가격은 올라가 이에 수요가 감소되어 동독상품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독기업도 갑작스러운 재무적 붕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동서독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해져 동독 노동자의 서독 이주가 서독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했었을 점은 輕視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통화통합이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확률은 높지 않다. 남한의 기본 통일정책은 한민족 共同體 方案이며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체제로서 “남북 연합체제”를 채택하자는 것인 한편 북한 통일 방안도 “高麗聯邦制” 즉 “一國二體制”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一國二體制下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통화통합 없이 가능하며 양국 정책 수립자는 양국의 경제지수의 融合(convergence), 一例로 생산성 또는 생활수준—을 통일경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速度가 양국의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 및 생활수준의 융

18) Bryson, Phillip J., “The Economics of German Reunification: A Review Articl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92, pp118-49

19) 金在慶, 상기인용, p60

합속도에 달려 있다면 독일의 경험을 엿보아 추산할 수 있다. Hallet와 Ma에 의하면 서독 생산이 연 2% 성장할때 동독이 9.1% 성장하더라도 동독이 서독의 생산성과 융합하는데 20년이 걸리며 동독 생산성이 연 6.7% 성장한다면 무려 30년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sup>20)</sup> 중국의 근래 경제발전 경험으로 보아 북한 경제도 고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경제 성장율도 발전국가로서 평균보다 고속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동서독의 생산성 융합에 소요되는 시일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큰 시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경제의 균형이 극심히 불균형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통화통합이 필요할 때 독일의 통화통합의 경제적 불합리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독일의 신속한 통화통합은 임금격차 때문에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하나의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역시 비슷한 남북한의 임금의 격차 때문에 남으로 이주하는 북한 노동자 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첫째 통화통합시 남북한의 생산성 차이에 기초를 둔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하는 것. 둘째, 북한의 財産私有化 執行을 주민 居住地 기준으로 할 것을 미리 공고할 것.(남한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살던 집, 토지 등의 사유화 일하던 기업체의 사유화 또는 기득권을 포기하게 됨) 세째는 북한의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조치, 기본 생활비 보조금 지출 등으로 보충하면 된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저임금 비교우위의 지역 경제적인 조건을 북한 경제발전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사회혼란과 경제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 VII. 맺는 말

북한은 작년에 핵문제를 돌출시켜 개방과 화해로 지향하던 한반도 관계개선 분위기에 폭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폭풍의 눈동자를 對美 수교협상에 두어 그들의 對서방 관계개선과 경제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도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 경제발전 조류에 북한이 편승 못하여 빈곤과 결핍을 못 면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동

20) Hallett, A. J. Hughes, and Yue Ma, "East Germany, West Germany, and Their Mezzogiorno Problem: A Parable for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Journal*, 1993(March) p 423, 426

맹국이던 구소련과 동구권과의 교역을 상실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해와 개방의 世界조류를 역행할 수 없어 북한은 제한된 개방을 단계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이 없는 체제수호 개방으로 主體思想 통치체제를 고수하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소위 “自力更生” 경제정책은 구조적 불균형을 助長하여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결론을 묵살하고 있다. 그들의 제일 우방국인 중국이 서방기술과 외국자본을 도입, 경제발전에 필수가 되는 기술이전, 기업관리, 해외시장개척 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정책은 중국의 경제모델을 모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방 과정에서 中國의 사유재산관계와 경쟁경제제도 도입은 모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이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의 特別法으로 대만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制度 역시 모방하지 않으므로써 남한의 투자는 다른 외국인투자와 똑같이 取扱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합영기업은 在日 조총련 교포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조총련의 대북투자가 기계 화학분야 등 북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생산분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발전의 시야를 넓혀 경제특구제도인 자유 무역지대를 나진, 선봉에 설치 다국적 외국자본과 기술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수립자들이 이해해야 할 일은 외국투자 유치사업과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수송, 통신망 등의 산업 하부구조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남한을 포함한 외자투자는 이익성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만강 유역 개발같은 대규모 투자 유도에는 북한의 산업에 대한 통계나 경제지표를 공표하여 외국기업이 북한의 정확한 경제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84년에 합영법이 실시된 이래 외자도입이 뚜렷하게 증대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선행조건 실현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여 주듯이 南北韓의 統一은 경제적 合理性의 기초를 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경제 융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통일의 창문’이 잠깐 열릴 때 정치적 우선주의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독일통일

21) 변종수, 상기인용, p76

은 정치 우선주의하에 주도되어 통화통합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急進的으로 이루어졌다. 더우기 독일은 동, 서독의 생산성의 적자를 無視한 換率을 적용 통일독일으로 하여금 동독의 저임금에서 오는 지역경제 비교우위 장점의 혜택을 상실케 한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개방과 교류협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제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천에서 볼 때 특히 동태적인 동북아 경제의 전망을 고려할 때, 北韓 경제도 궁극적으로는 개방되고 개혁되어 北韓도 환태평양 時代의 주도국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